도청 별관 부분보존 확정…문화전당 건립 속도낼까

29일 최종 발표된 옛 전남도청 별관보존 방식에 따르면 빨간색 점선 내부의 건물이 모두 철거된다. 도청 본관과 별관을 연결하는 6m길이의 연결통로, 그리고 연결통로와 맞닿은 곳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4m까지의 별관 건물 등 모두 30m길이의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추진단 "工期 최대한 앞당기겠다"

구조보강 거쳐 별관은 외부만 보존
일부 시민단체 반발 재논란 우려도

'철거'나 '보존'이냐를 놓고 2년여 동안 논란이 된 옛 전남도청 별관을 부분 보존하기로 함에 따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9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의 부분 보존 방식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설계자문위원회와 조성위원회 회의를 통해 별관 전체 54m 가운데 24m를 헐어 통로를 내고 나머지 30m는 보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옛 전남도청 전면의 전체 길이 132m 가운데 108m를 보존하는 것으로, 면적으로 계산하면 문화전당 내 5·18 관련 건물 전체면적의 1%가 철거되는 셈이다.

5·18 관련단체와 시도민대책위 등은 별관에 터널을 내는 '게이트안'을 주장했지만, 추진단은 안전진단 결과 최하위등급인 'E'등급이 나오는 등 구조보강을 한다 해도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다, 건물 자체가 뒤쪽으로 기울어 일부만을 보존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지난 19일 개최한 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설계 원안대로 철거 3인 ▲부분보존안 찬성 5인 ▲검토필요 2인, 그리고 지난 20일 개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에서는 ▲부분보존안 찬성 9인 ▲반대 1인의 결과에 따라 부분보존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부분보존안이 확정됨에 따라 상무관은 추모공간으로, 도청 본관은 아시아 민주·인권·평화관련 전시·교육공간으로 사용하고 경찰청 건물은 행정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들 건물은 외부에는 일절 손을 대지 않고 내부만 리모델링해 사용하게 되며, 부분보존되는 별관은 구조보강을 거쳐 건물 외부만 보존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이 문화전당 건립을 2012년까지 당겨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건물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독자적으로 특정 건물만을 완공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건물과의 연결관계가 비교적 느슨한 민주평화교류원 등 일부 건물의 공기는 최대한 앞당기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진단이 발표한 부분보존안에 대해 '게이트안(5월의문)'을 주장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05년 12월 우규승 설계자의 '빛의 숲'안이 문화전당 설계 당선작으로 발표된 이후 랜드마크(Land mark) 논란이 벌어지면서 전당 개관 목표년도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연장된데 이어 최근엔 도청 별관보존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공사 완공이 또다시 2014년으로 미뤄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날 회견장에서도 5·18부상자회와 시민대책위 일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보존할 바에야 차라리 부숴버려라', '옛 도청 별관만 안전진단에서 E등급이 나온 것은 별관을 철거하려는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다' '생뚱맞다'는 등의 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이병훈 추진단장은 "부분보존안을 발표하기 전 관련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사전에 설명을 했다"며 "모두가 100% 만족하는 방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분보존안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해 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단장은 또 "옛 도청별관을 둘러싼 논란을 또다시 거듭해야 하는지 146만 광주시민에게 묻고 싶다"며 "문화전당 건립공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2005년부터 못쓰고 이월한 예산만 2500억원에 달한다. 국회예산 따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내부의 분란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앞으로 정말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이어 "광주시민 절대다수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못한다. 건립비만 7000억원, 매년 운영비 300억원, 운영인력만 400명에 이르는 문화전당 건립사업을 광주시민이 반대한다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옛 전남도청 별관 논란 일지

▲2005년 12월2일=우규승 씨의 '빛의 숲' 문화전당 설계안 선정.
▲2008년 6월10일=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기공식 개최
▲2008년 6월24일=옛 전남도청보존 공동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2008년 12월9일=전당공사 잠정 중지
▲2009년 2월29일=전당공사 재개.
▲2009년 6월3일=광주시장과 국회의원으로 '10인 대책위' 구성.
▲2009년 6월29일=시민사회단체 별관보존 '10인 대책위'에 위임.
▲2009년 9월22일=문화체육관광부 장관·10인 대책위, 도청 별관 부분보존 합의.
▲2009년 12월30일=별관 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
▲2010년 5월19일=전당 인근 금남지하상가 지반 일부 붕괴, 별관 보존방식 발표 연기.
▲2010년 7월19일=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2010년 7월20일=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부분보존안 결정.

정총리 사퇴…후임은 누구?

재보선 승리로 '리더십 갖춘 실무형' 급부상
내달초 개각…광주·전남 2~3명 입각 예상

정운찬 국무총리가 29일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다음 달 초반으로 예상되고 있는 개각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특히, 후임 국무총리 인선과 함께 청와대 비서관급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의 입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후임 국무총리는 지난 6·2 지방선거 패배 여파로 그동안 소통과 화합형 인물에 초점이 맞춰졌었으나 여당의 재보선 승리로 인선 기준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재보궐 선거 승리로 여권이 국정추진력을 되찾으면서 후임 국무총리는 '실무형의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중용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대해 "앞으로 2012년까지는 선거가 없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후임 총리의 조건으로는 △이 대통령의 속내를 잘 아는 측근 △여권 내 강한 리더십을 갖춘 인사 △실무에 정통하고 강한 추진력 등이 꼽히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은평을에서 승리한 이재오 당선인이 총리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이석연 법제처장, 이완구 전 충남지사, 정우택 전 충북지사,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도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다.

개각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개각 시기는 8·15 광복절 이전인 8월 10일 전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28 재보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8월 초 휴가를 통해 개각을 포함한 후반기 정국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7·28 재보선이 여당의 승리로 귀결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보다 여유를 가지고 개각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개각의 폭도 거의 조각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철저히 배제됐다는 점에서 이번 개각에서는 국민 화합과 소통 차원에서 과감한 발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단, 현 내각의 광주·전남지역 출신인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교체 대상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 광주·전남지역 출신이 최소한 2~3명 이상 중용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의 재보선 승리로 정부 및 여권에는 보다 겸허한 자세가 요구되고 있어 다음달 이뤄질 개각은 국민통합과 소통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 소외됐던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들이 개각에서 중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시 제2컨벤션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전시장 규모 7540㎡로 늘리고 사업비는 줄여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시된다.

광주시는 29일 서구 5·18 자유공원 부지 2만3628㎡에 전체면적 5만1790㎡,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최근 지식경제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국비지원을 비롯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투자대비 편익비율이 1.0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총 사업비를 애초 1530억원에서 1460억원(국비 730억원, 시비 730억원)으로 70억원 줄였다. 또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전시장 규모를 애초 4286㎡에서 7540㎡로 늘렸다. '투자대비 편익비율'은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광주시는 광주보다 컨벤션센터 규모가 큰 부산과 대구 등도 전시·컨벤션 시설을 늘리고 있는 만큼,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지역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제2컨벤션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유치한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를 비롯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대형 회의시설 증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광주시는 내년 4월께 발표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공사에 들어가 2014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전시장 가동률이 성수기에는 70%에 이르는 등 광주지역 내 전시·컨벤션 시설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는 물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제2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컨벤션터에는 전시장뿐 아니라 3000석 규모의 객석을 갖춘 회의장과 중소 회의실, 쇼핑센터 등이 들어선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